국민노후보다 눈앞 표심 연금개혁 논의 지지부진

여야, 개혁 주도권 두고 극한 대립
전문가들 "보험료율 인상 서둘러야"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를 완수를 목표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정치권이 입을 모아 연금개혁의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혁 논의는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개혁 주도권을 놓고 여·야 사이의 대립이 극명해서다. 여·야 대립으로 개혁 논의가 본궤도에도 오르지 못한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떠오르며 '표심'과 거리가 먼 연금개혁은 더 어려운 과제가 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올 상반기 완수를 목표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앞서 발표한 정부안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개혁의 방향성 설정 및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의 원활한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단일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현행 보험료율인 9%를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2%까지 인상하는 계획이다. 재정안정을 위한 '연령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안도 포함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치며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약간 이견이 있지만 서로 공감대가 있기에 국회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되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서두르고 있지만, 논의 및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10일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보건복지위 의원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인 기재부, 노동부, 금융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연금특위의 출범을 주장했다. 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논의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만 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서는 다른 부처와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개혁안 도출이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해 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 출범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11일 여당에 보건복지위가 주관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공청회'의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야당이 보건복지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연금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여당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박주민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민주당의 제안으로 복지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 희망적이며, (이번 공청회 개최가) 국회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연금개혁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가 됐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여파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연금개혁은 '표심'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가 시급한 만큼,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보험료율 인상만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안의 근본 골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이라며 "여야 모두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13% 수준이라도 인상을 실행해 보험료율 인상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실손보험 개혁안 갈등 고조 "비급여 제한" vs "졸속행정"

〈정부〉 〈의사단체〉

정부 "적자 주범인 과잉진료 해결"
의사협회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

실손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보험업계와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최근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자문기구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동안 비급여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가 동반상승하는 문제를 빚고 있다.

의개특위가 공개한 실손보험 개혁 초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비급여의 경우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非)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한다. 보상한도와 자기부담, 출시시기 등도 차등화한다.

특히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인 비급여 과잉진료 해결을 위해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고 모두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중증 비급여 중 의료 남용 우려가 큰 경우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높인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는 첨예한 이해 갈등 속에 개혁 논의가 지체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구체화해왔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과 의료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사단체는 의개특위가 공개한 실손보험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비급여 행위 제한은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신설 및 본인부담률을 90~95% 적용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손보험 개혁안이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손보험 문제의 원인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에 있는데 정부가 나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크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보장내역 축소에 대해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실손보험 상품과 함께 근본적인 비급여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데 의료계의 비급여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은 보험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실손보험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비급여 개편에 대해 본인들의 수익을 많이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최측근 영입하고 영화 제작까지… '코드 맞추기' 분주

》1면 '트럼프 눈치보는'서 계속

마커 저커버그 등 취임식 참석 예정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DEI 정책을 종료하라는 일부 주주의 제안을 거부하며 "기회 균등 고용주"로서 차별 없는 채용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식 참석·기부로 '트럼프 코드' 맞추기 행보

빅테크 기업들은 DEI 정책 폐지 외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맞춰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메타는 지난 7일(현지 시간)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 팩트체크'를 폐지했다. 또한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데이나 화이트 UFC 최고경영자(CEO)를 이사로 영입하고, 공화당 인사 조엘 캐플런을 글로벌 정책 책임자로 승진시키며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비롯해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 등 주요 빅테크 수장들은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이달 초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행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빅테크 규제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을 앞두고 적극적인 '코드 맞추기'에 나선 모습이라는 해석이다.

/이혜민 기자 hyem@

"글로벌 경쟁력 위한 '골든타임' 지켜야"

》1면 '3자 국정협의회 가동'서 계속

한경협, 관세법 등 신속 처리 촉구

특히,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또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는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포함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중소·중견기업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간 및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등)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